

선거법 위반 단체장 수사 '봐주기식' 질타

광주 법원·검찰

법사위 '사법농단에 따른 신뢰 추락' 집중 지적 박지원 의원 "전두환 반드시 역사 법정 세워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광주지·고법, 광주지·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민선 7기 단체장들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광주검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고등·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용섭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봐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시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했으며 검찰 역시 이 시장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며 "이에 대해 '꼬리자르기식·봐주기식' 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 판단이었나"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은 정형적인 여당무죄, 야당유

죄사건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성범 광주지검장은 "봐주기 수사"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에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고등·대전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금 사법부가 지나온 세월 중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는 때이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작성에 대해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작금의 사법부는 신뢰 추락을 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신뢰추락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면적으로는 법관들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판사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지법 6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고법 및 대전고법 산하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가 이 같은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 법원장들은 "송구스럽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사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답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 "전 씨를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 씨에 의한 정권 전탈 사전 계획과 행동, 5·18 당시 공수부대 진압 발포 명령, 헬기사격 진압 흔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전 씨를 반드시 광주 역사 법정에서 세우는 것이 촛불혁명이다"고 강조했다.

말말말

"조현민이예요?"

23일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이 진행되던 가운데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이 대전지법 법관들의 갑질 행태를 강하게 비판.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갑질 사례로 "여직원에게 아침마다 토스트를 준비시킵니다. 토스트 위에는 계란후라이를 얹게 합니다..." 등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갑질 행태를 질타.

또 법원 내부 계산관을 도배한 판사들의 막말과 갑질 등 도를 넘어서는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은 대전지법 판사들이 조현민이냐고 하고 물음.

이는 대전지법 판사들의 갑질을 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빗대어 한 말.

의원들을 소개합니다

23일 법사위의 광주지·고법과 광주지·고검 국감 현장에서 여상구 법사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지역 연고가 있는 의원들을 일일이 소개.

목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화당 박지원 의원 소개를 시작으로 장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해련(경기 수원시) 의원 등 호남권에 연고론 의원들을 소개했으며 일부 의원의 경우 출신 초등학교를 비롯해 개인 프로필 사항까지 알려주는 데 수분을 소요.

이같은 의원소개는 오후 이어진 광주지·고검 등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도 되풀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 '여야 한목소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주문
광산세무서 신설·적극적 세정 지원 촉구

광주국세청·한은 광주전남본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이뤄야 합니다."

23일 광주지방국세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대자동차 합작투자를 통한 완성차 공장을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의원들은 광주·전남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침체 중요한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경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적인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켜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나서서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는 높은 반면 생산성과 노동 유연성은 낮아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가 나왔다"며 "민주노동 등 강성 노조와 고임금 기득권 구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도 노동분야

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며 노사민정 상생을 요구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대도 많고 잘 정착됐으면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정착을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상상과 타협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기업 자동차 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지역사회와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야 국회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남지역 자영업자 평균 수입은 2천400만원으로, 강원도보다 조금 많지만 전국 하위권이고, 광주·전남 지역이 전국 자영업 종사자의



23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40%를 차지하는데도 매출액은 10% 밖에 안된다"며 "광주·전남의 자영업이 전국에서 가장 영세하고 영업이익도 적는데, 최저임금까지 갑자기 오르다 보니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업을 상생의 주원인이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미스매칭 때문인데, 을

하는 노동수요가 축소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며 "지역본부 조사연구보고서의 자영업자 리스크 원인을 보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없다. 최저임금 차등화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개인

사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2만4천259명에 달하지만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하다"며 "호남지역은 산업 기반 특성상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아 세정지원의 한계가 있지만,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빛그린산단과 선운·하남지구, 송정역 개발 등이 있는 광산구는 앞으로 계속 인구유입이 이뤄져 곧 50만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로 비슷한 규모인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개설됐는데, 광산세무서 신설은 왜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환 광주국세청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기능적·변칙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등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온기가 나오도록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세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무등일보 창간 30주년
30th Anniversary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순천시의회	농협중앙회순천시지부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시체육회	순천농업협동조합	한국수자원공사주암
순천상공회의소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순천원예농업협동조합	순천중앙병원
		선암요양병원

순천시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중욱

김관욱

강성채

이성기

허창주

장석규

이병협

정효성

송영웅

박근홍